

발 간 등 록 번 호

11-1312000-000082-10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3년 협업행정 우수사례집



안전행정부

발간사

저출산·고령화, 기후·환경 문제, 사회의 양극화 현상, 경제문제의 글로벌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현안을 특정부처가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정수요의 등장으로 정부는 새로운 정책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 상호간 관련 업무에 대한 기관간 업무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입니다.

정부 3.0 추진전략의 하나인 「유능한 정부」의 구현은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의 상호 협업을 기반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기관간 경계를 뛰어 넘어 업무를 서로 연계·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예산·시설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협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들은 안전행정부에서 협업 활성화 및 협업문화 촉진을 위해 발굴한 '13년도 우수사례로서 협업 추진시 모범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협업 우수사례집이 각 기관의 자율적인 협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에 참여해주신 각 기관 담당자와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5월

안전행정부 장관

강 병 규



CONTENTS

1. 부처간 협업으로 학교 식중독 조기 차단 9
2.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자동차관리 OK! 15
3. 작목별 농업기술, 품질 정보 등
농업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19
4. 전국 최초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증대 25
5. 교육훈련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33
6.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영상회의 활성화 39

- 7.**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로
 여행자 출입국 관리 칸막이 제거 43
- 8.**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협업 시스템 정착 49
- 9.**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공유로 방문민원 획기적 감축 55
- 10.**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통계 행정의 효율화 도모 61
- 11.** 건강과 환경,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구축 65





2013

협업행정 우수사례집



1

부처간 협업으로 학교 식중독 조기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교육지원청), 농수산유통공사는
기관간 협력으로 학교 식중독을 조기 차단하고 학교
급식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의 필요성

학교 식중독은 대규모로 확산 가능

우리나라 학교의 100%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 674만명 중에 99.5%(671만명)가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가 오염될 경우 대규모 식중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2006년에는 1개 회사의 식재료 오염으로 46개교 3,613명에 달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식중독 발생 장소별 환자수로도 학교급식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12년, 52.6%).

학교 식중독 조기차단을 위하여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동일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에 SMS 통보 등 조기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08.02~)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은 학교와 계약된 급식 관련 업체 및 연관 학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학교에서 집단 실시환자 발생이 다른 학교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주의 경보를 미리 전파하여 식중독 사고의 확산 방지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학교식중독예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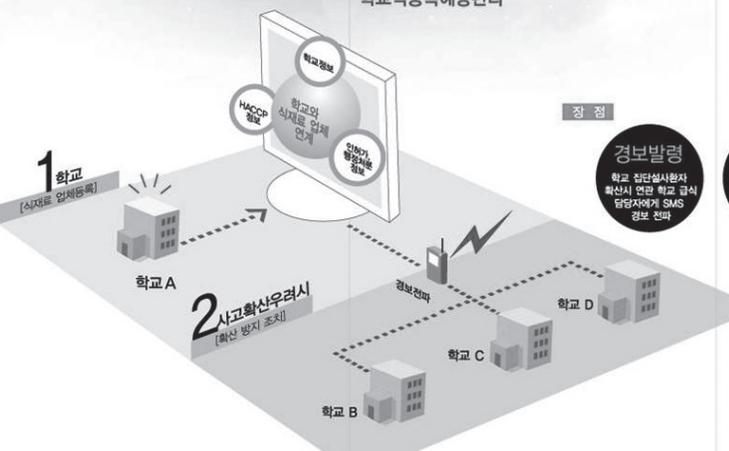




- 발생학교
- 식재료공급업체
- 연관된 다른 학교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학교식중독예방관리



1 학교
[식재료 업체등록]

2 사고확산우려시
[확산 방지 조치]

장점

- 경보발령**
학교 집단실사용자 확산시 연관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SMS 경보 전파
- 현황제공**
전국 학교 정보와 연관된 학교급식 업체 현황
- 이력조회**
학교 급식 업체 선정시 계약업체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 정보 제공
- 우수업체 정보**
HACCP 지정업체 및 직영 용역 정보 제공

기대효과

- 실시간 현황파악으로 신속 대응 용이
- 특정학교나 지역에서의 집단 실시환자 발생이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
- 예방을 통한 학생 건강보호에 기여

신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식재료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입력)해야 하지만 수동 입력에 따른 자료입력의 지연/누락으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로 식중독 발생 시 관련학교에 실시간 조기경보 발령이 되지 않거나 조기경보 발령 지연으로 학교 식중독의 조기차단에 문제점이 있었다.

※'13.9.13. 조사결과, 11,000여개 학교 중 자료 미입력 학교가 3,174개교(약30%) 차지

또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가 식약처, 교육부, aT 등에 분산관리 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예컨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업체의 식중독 현황,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등의 정보가 없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은 학교 및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세부 자료가 부족하였다.

추진 과정

학교 식중독 예방에 범정부적 공감대를 형성하다

「식중독예방 범정부협의체」는 학교 식중독의 조기차단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관련기관(식약처, 교육부, 지자체 등)간 협의하였으며,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연계구축사업을 국정과제(77-6, 급식소 위생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단위과제로 채택하였다. 한편, 식약처와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13.8.16)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하였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다

식약처, 교육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및 협조할 수 있는 기술 범위 등에 대해서 수차례 세부협의를 거쳐 논의하였으며, 안전행정부 광주통합전산센터는 시스템 통합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기관별 공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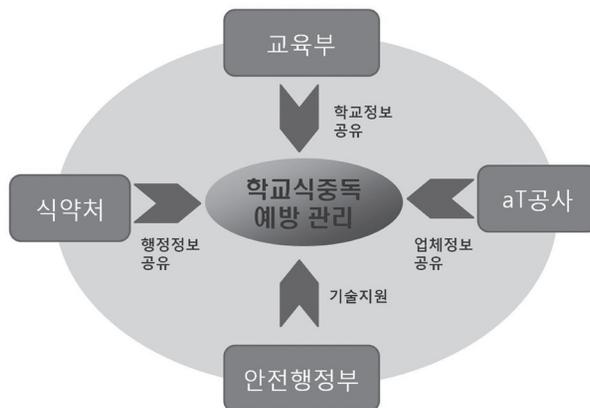
기관	제공 정보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식약처	행정정보	-	식재료 공급업체 행정처분 정보, 해설통보
교육부 (교육청)	학교정보	학교	학교식별코드, 학교명, 학교주소, 학교고유번호, 학교연락처, 학교급식유형, 공동급식여부
농수산 식품유통 공사 (aT공사)	업체정보	공급업체	공급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연락처, 대표자명, 주소, 계약기간 공급업체 사후 평가 정보
		제품정보	제품명, 제조업체(소재지), 수량(단위)

* 김치의 경우 원산지 등 유통정보 포함

성공 요인은 역시 '협업 정신'

◆ 성공 요인 ◆

- 학교 식중독 관련 정보의 통합 필요성 공감
- 학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범부처 및 기관의 노력
-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과제 등 국가적인 추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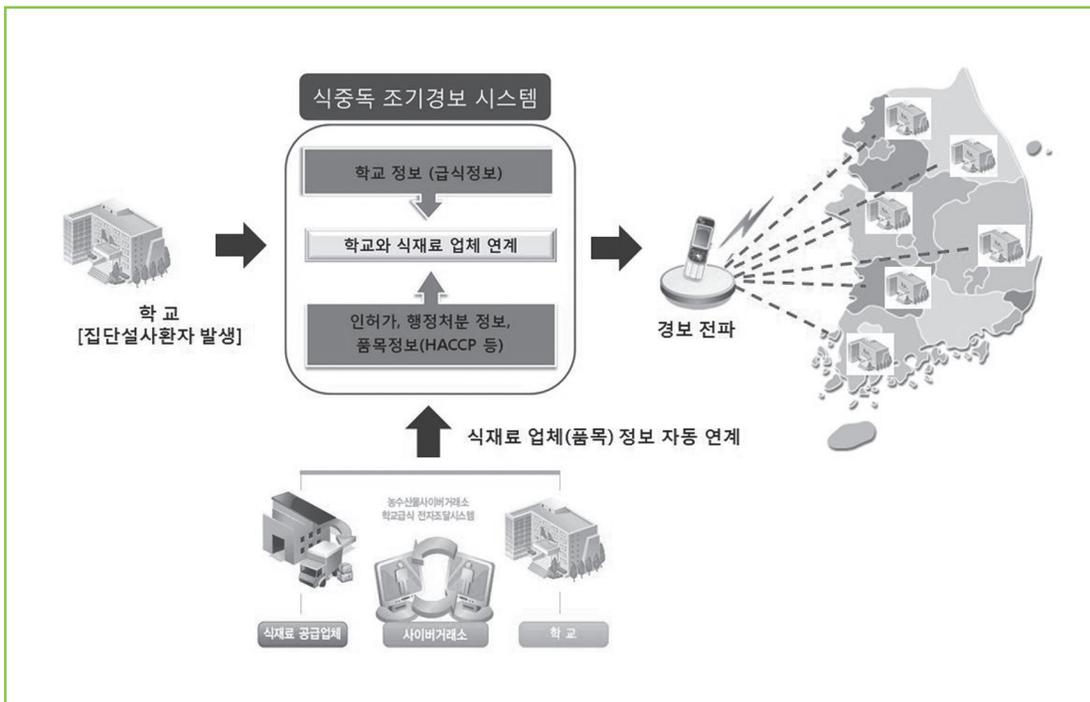
기대되는 효과

학교 식중독을 조기 차단하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하는 학교(전체 학교의 61%)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정보가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어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중독 발생보고와 동시에 동일한 식재료를 납품받는 연관학교에 실시간으로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학교 식중독은 실시간 조기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식중독 발생 학교간 동일 식재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식중독 의심 식재료에 대하여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부서가 원인조사 및 유통단계 조사를 곧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식중독 주요 원인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치에 대해서는 제품명, 제조일, 제조용수, 원산지 정보 등 세분화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식중독 조기차단 및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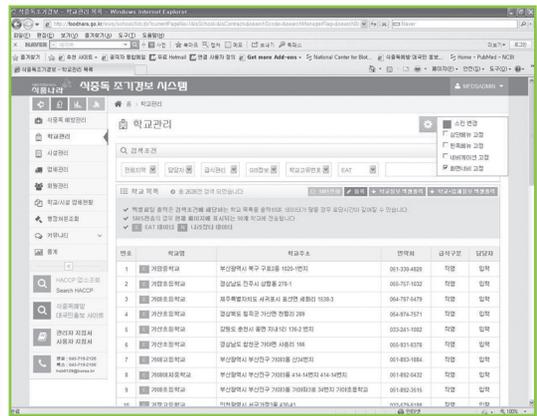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다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하여 개별학교에서 식재료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aT에서는 개별학교의 납품업체 ‘사후평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급식소는 보다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급식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의 수동입력을 자동입력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학교 급식 담당자(주로 영양사)의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 더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메인화면〉



〈실시간 연계된 학교 리스트〉

앞으로의 과제

식약처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 등을 납품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 연계구축사업을 통하여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과 연동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14년 2학기부터는 급식실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가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실시간 연계가 될 것이다.

2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자동차관리 OK!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는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중고차 거래 투명화를 위해 자동차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내차의 정확한 연식은? 압류나 저당은 걸려있는지? 자동차검사일자? 자동차세는 모두 납부했는지? 정비는 언제 받았는지? 중고차 살 때 성능·상태는 어땠는지? 보험회사는 어디고 언제 가입했는지? 한번 짚은 궁금했었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 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가 긴밀히 협조하게 되었다.

사업의 필요성

내 차가 있다. 그런데 내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과거 대다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알고싶은 사항이 생기면 잠시 당황하다가 차량에 비치된 “자동차등록증”을 꺼내 본다. 그러나 손에 든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을 등록할 당시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 최근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험가입증” 또는 “할부이용계약서” 등을 뒤져서 꺼내보고 서류에 적혀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하기 일쑤이다.

그래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는 등록관청 민원전화를 통해 문의를 시도하고 자동차세, 성능상태, 정비이력 등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받지 못하여 예전 거래했던 중고차 매매상사나 소재지 세정공무원에게 또 다시 전화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참 어렵네~)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자!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자동차관련 생애주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소통의 편의를 위한 정보연계체계를 포함한 자동차 생애주기(제작에서 폐차까지)이력을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보의 공유·개방 통합관리체계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국토교통부(제원, 소유권, 압류, 저당정보), 교통안전공단(정기검사 이력), 제작사·정비업체(정비이력), 보험개발원(사고이력), 안전행정부(자동차세), 매매업체(성능상태기록)

IT 강국의 기술력을 접목하자!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대비하고 첨단IT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중고차 거래 투명화를 위해 자동차 이력정보 통합관리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토털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하여 사업추진 5개월만에 지난 2013년 12월 1일에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

대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 통합을 위한 이력보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장애요인의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유관기관	역할	유관기관	역할
교통안전공단	기본사항·검사이력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경정비이력
안전행정부	지방세 납부이력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의무보험 및 사고이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성능상태이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정비·성능상태이력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주요성과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이익의 제공 기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현재까지 221만여건('12년 : 108.8만건, '13년 : 112.7만건)의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 중이며 자동차 소유자 등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제공받아 자동차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등 국민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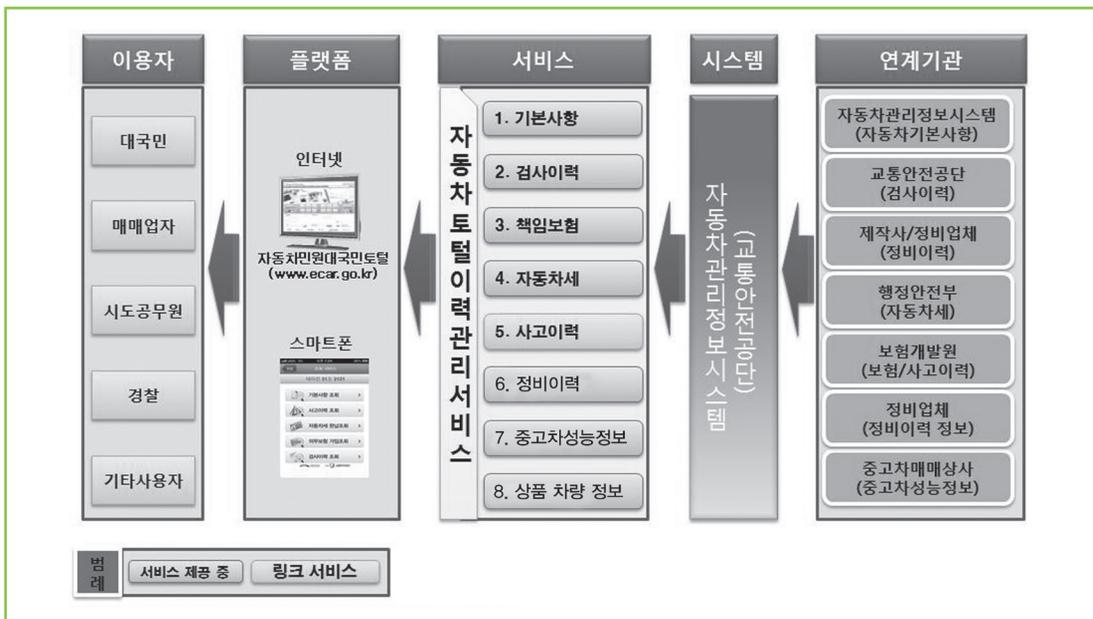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

자동차 기본사항 외 정비이력 및 성능상태점검이력 등 중고차 거래 시 향상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13.9.1 이후 '13.11.4까지 총 2,083개 업체가 등록하여 76,459건의 이력자료가 전송·수집되어 통합관리 중이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정비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이 추가로 제공되어 믿고 사고 파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향후계획

정보 부가가치의 향상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민원 업무를 연동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압류내역 조회 후 압류해지납부가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를 연동 제공할 예정이며 정비된 부품이 중고부품인 경우 인증여부 등을 제공하도록 추가적인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계하는데 지속적 노력을 할 예정이다.



3

작목별 농업기술, 품질 정보 등 농업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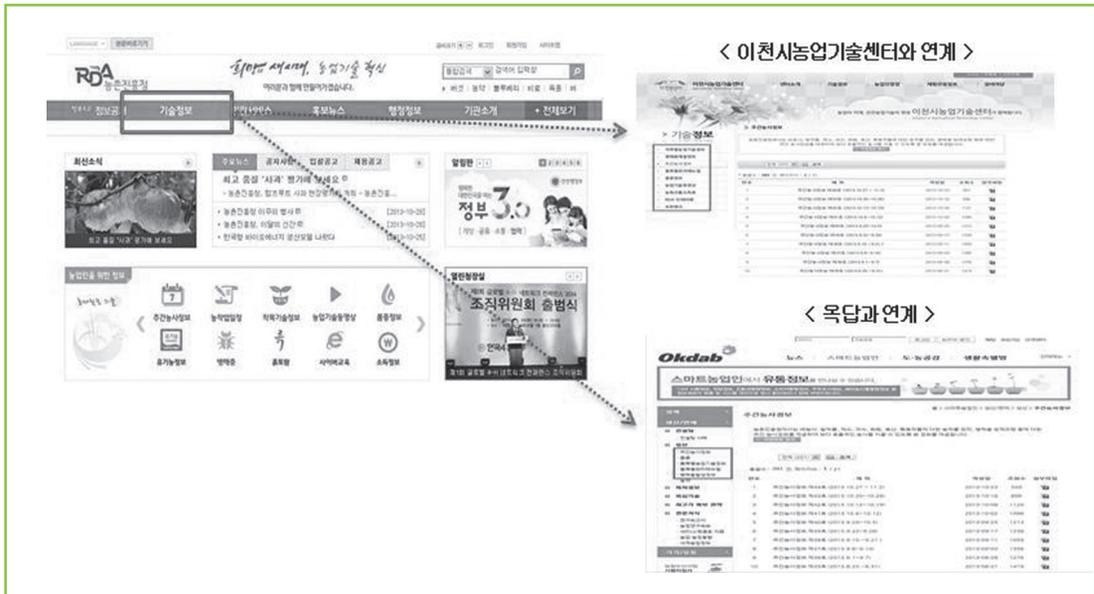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인간포털과의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농업정보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의 필요성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업기술정보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지고,
 개방된 농업정보와 다른 정보간 융합을 통한 가치 있는 새로운 농업정보 생성의 시대가 열린다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영농에 필요한 작물재배기술정보와 도시민의 관심정보 등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관심과 요구분야가 다양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이용환경이 열악한 농업인의 연령계층이 높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사용자의 정보수요에 맞추어 주간농사, 농작업일정, 작목별농업기술, 품종 정보 등을 개방하였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기관간 개방된 농업기술정보 연동서비스 구현〉

추진 과정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정보 자동연동서비스 신청 후 설정작업 한번만 하면 자동으로 연동서비스가 되게 만들어 현재 137개 농업관련기관이 기관의 고유정보와 개방된 농업기술정보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개방정보의 일일 평균접속자는 12,518명으로 개방이전에 비하여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농업관련기관간 정보연동서비스가 가능했던 건 농식품부의 작목표준코드를 준용한 청의 작목표준코드 체계를 마련하여 코드 표준화를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농진진흥청 표준 품목코드

X XX XX XXYY WW

국가기술 표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표준 품목코드

신규 부여 세분류

대분류	식량, 과수, 축산 등 작목단위 분류	9개
중분류	생물적 특성 또는 이용특성에 의한 분류	52개
소분류	품목단위 분류	897개
세분류	품종중심의 일반화 되어 있는 기술 또는 품목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0개

[품목코드 사례 - 감자(0501)]

국가기술표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F	FC	05	0501	050101

< 품목표준코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소분류) 코드	세분류코드	세분류명
KC	식량작물	01	벼	0101	논벼
KC	식량작물	01	벼	0102	밭벼
KC	식량작물	02	밀	0201	밭밀
KC	식량작물	02	밀	0202	논밀
KC	식량작물	02	밀	0203	표본
KC	식량작물	02	밀	0204	표본
KC	식량작물	02	밀	0205	표본
KC	식량작물	03	부추	0301	표본
KC	식량작물	03	부추	0302	표본
KC	식량작물	03	부추	0303	표본
KC	식량작물	03	부추	0304	표본
KC	식량작물	03	부추	0305	표본
KC	식량작물	03	부추	0306	표본
KC	식량작물	03	부추	0307	표본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0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1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2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3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4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5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6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7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8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0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1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2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3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4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5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6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7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8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499	배수주
KC	식량작물	04	감자	0500	배수주

<작목 중심의 품목표준코드 작성>

품목(분야)코드

대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코드	중분류	품목 코드	품목(소분류)	세분류 코드	세분류명
FC	식량작물	01	벼	0101	논벼	010101	일반벼
FC	식량작물	01	벼	0101	논벼	010102	복수, 기능성벼

기술정보서비스코드

분류	기술	설명	
		일반사항	기술
G	일반사항	01	임간지, 재배내역, 재배적 경역적 특성 등 일반사항
S	품종, 대목(숙)	01	육종내역, 품종특성, 재배적의 유의발검, 품종선별요령 등에 관한 기술

기술정보 매핑 테이블

원 관리체계도				품목코드체계				기술분류코드			
구분	적용명	적용명	기술명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품목(소분류) 코드	세분류명	분류명	기술명	기술명
원종립	채소	고추	생리적 특성	VC	채소	01	과채류	1205	고추	C	재배(식량)
원종립	채소	고추	품종 고부기	VC	채소	01	과채류	1205	고추	S	종자(숙)

<품목과 서비스 표준코드에 의한 기술정보 개방체계 완료>

작목별 농업기술, 품종 정보 등 농업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최근 농업인은 새로운 소득작목과 가공·체험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도시민은 텃밭과 베란다 가꾸기 및 귀농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민간포털 네이버와 병해충 DB 127종 연계, 농촌진흥청 TV캐스트 채널을 개설하여 '나만의 미니정원만들기', '치즈만들기' 등 도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농업정보를 공유·서비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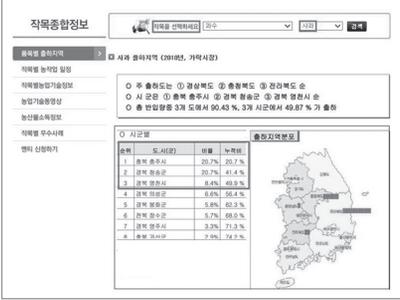
<지식사전에 병해충정보 상세정보 청 관련정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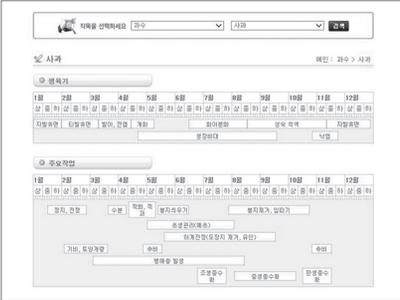
<네이버 TV캐스트 농촌진흥청 채널>

개발된 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최근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작물재배기술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준비자가 전화로 많이 문의하는 것은 어떠한 작목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른 기간 내에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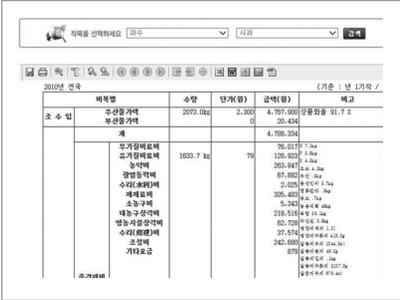
이러한 귀농준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서비스 사례는 귀농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사과작목을 선택하면 가락시장 출하정보에서 주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월별 사과재배관리일정과 주요 재배기술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300m² 조수익과 경영비 및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귀농희망지역에 전문농업인이 누구인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목종합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사과 주산지 출하정보



사과 농작업 일정



사과 소득정보



사과멘토정보

< 개방된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작목종합정보서비스(http://www.returnfarm.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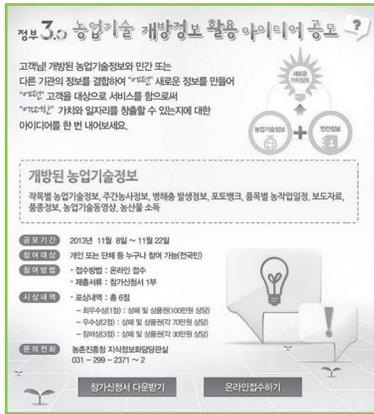
주요성과

사용자 맞춤형 농업 정보서비스는 그동안 귀농준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불편을 해소하였고 유익한 귀농관련 정보가 서비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농준비자와 귀농인이 일일 10,000명이상 방문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정부3.0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정보개방도 중요하지만 개방된 정보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노력이 정보개방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각도별 농업기술, 품질 정보 등 농업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협업행정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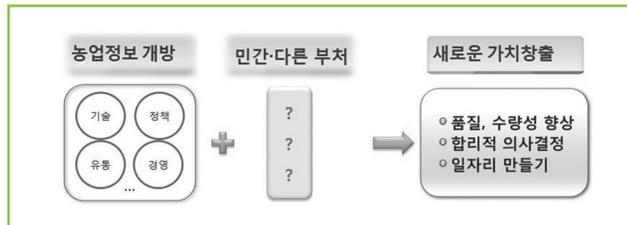
개발된 농업기술정보를 어떠한 업무에 가공·편집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모전도 실시하였으며, 45건의 다양한 아이디어 중 6건을 선정한 바 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소비자가 원하는 농자재 및 품종정보 서비스(김시민)’는 농자재·종자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농촌진흥청의 농자재·품종정보 및 농작업일정 정보를 연동해 농업인이 농협과 판매상 중심의 고비용 약제선택에서 벗어나 작물별·시기별 선택적 방제가 가능하고, 알맞은 농자재 선택으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개발된 농업기술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포상〉



구분	데이터	정보	지식 (맞춤형 서비스)	지혜 (맞춤형 활용)
융합단계	1단계	2단계 (정보 서비스)	3단계 (개발된 정보+정보융합가치창출)	최종 단계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가치	100%	200%	300%	500%
일자리창출	단순 일자리	중급 일자리	고급 일자리 (컨설팅 창업, 매쉬업)	특급 일자리 (컨설팅 창업, 매쉬업)
활용변화	단순참고	업무활용	가공·분석	합리적 의사결정

〈맞춤형 농업정보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

4

전국 최초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증대

대구광역시와 구·군간 업무 협업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대폭 끌어올려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사업의 필요성

복지재원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최근 보육비 등 복지재원 증대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정당하게 부과된 조세의 체납을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포차 등 자동차세 체납증가로 인한 조세형평성 저하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는 이미 전국민의 대중세인 반면에 납세의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세목이며, 특히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 뿐 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대구시의 지방세입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의 체납대책 필요

2012년 전국 지방세 총 징수액 53조 9,381억원 중 자동차세 징수액은 12.8%인 6조 8,858억원이나 대구시의 경우 지방세 총 징수액 2조 734억원 중 3,649억원으로 17.6%를 차지하여 지방세 중 자동차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 675억원의 40%를 차지¹⁾하고 있어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핵심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1)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포함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52억원으로 대구시 체납액의 52% 차지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²⁾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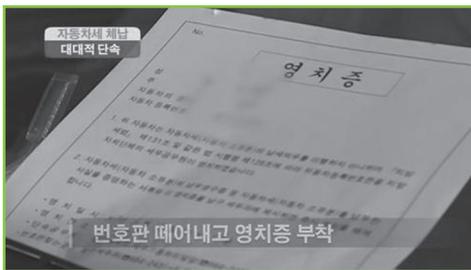
가령 대구시 남구 번호판 단속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 달서구에 등록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발견될 경우 남구 단속팀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도 대신 징수해 주는 대신 해당 징수금액의 일부를 달서구에서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국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2009년 10월부터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동일 광역시내의 각 구군간에 별도로 징수촉탁을 실시하여 운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례이다.



〈자동차세 체납단속 보도〉



〈주행형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후 영치증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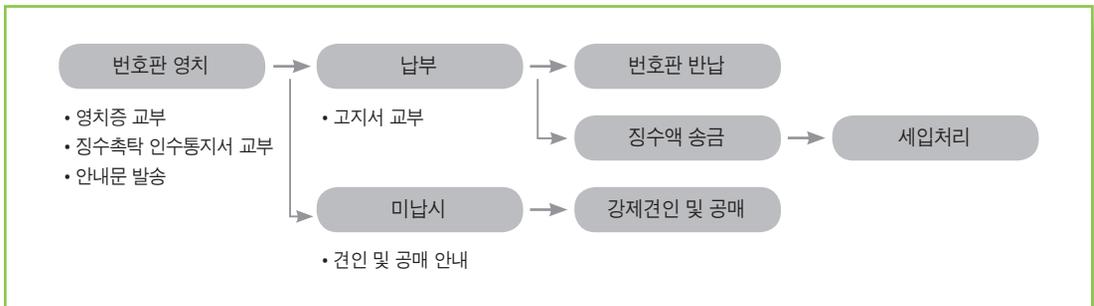


〈영치후 번호판 관리〉

2) 지방세 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징수를 위·수탁하여 운영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3회 이상 체납차량 공매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이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행된 반면 대구시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여 그 실효성이 높고,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타구군 체납자동차라도 먼저 발견하여 견인 인도한 구군에서 강제 공매절차까지 실시하여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징수촉탁 업무처리도〉

체납 자동차세를 대신 징수해준 구군에 징수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이후 자동차세를 대신 징수해 주면 체납 징수액의 20%를 징수촉탁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어 구군 자체의 세입증대에도 도움이 되어 체납액 징수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

징수촉탁 업무처리 매뉴얼 표준화 및 데이터 공동활용

징수촉탁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징수촉탁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시에서 일괄로 자동차세 정보를 제공하고 휴대용조회기 프로그램 상에 체납 자동차세 DB를 구축하여 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매월 10일 생성하여 구군에 통보하면 구군에서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고 있다.

대포차 집중정리 및 첨단장비 적극 활용

징수촉탁제 실시와 더불어 체납차량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6월말 현대캐피탈과 공매협약(MOU)을 체결하여 대구시 등록 자동차 중 4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및 공매 처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대포차 및 3회 이상 체납차량의 행방을 일제히 추적하여 대포차 등 체납차량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주행형 차량단속시스템 확충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변호관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다.



〈차량탐재형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대구신문 2013년 03월 29일 수요일 010면 중앙

대구시, 체납세 징수 총력

대구시와 지역 각 지자체들이 고졸 및 상급 체납자들에게 대한 행정재제 강화 등 다양한 지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두 팔을 걷었다.

19일 대구시와 각 지자체들이 다르 면 시는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을 지난해 1조6685억8천700원보다 842억원 높인 1조7천539억8천700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구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8개 구·군간 차량체납 징수촉탁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인 징수촉탁제는 기명 사구의 체납차량 일괄 정산 시 담사구에 등록된 차량이 발견된 경우 담사구가 변호관 영치 및 체납 징수를 하되 해당 징수금액의 20%를 직접 담사에 나간 사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대구시에 앞서서 별도로 실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 대구시는 8개 구·군별 읍에 지방세청 운영체제를 조기 확립, 시행 해하는 것을 추진·과 지자체에 마 령했으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키로 하고 각 구·군별 정산실적을 대 분기 별로 공개하는 한편 평가결과 상위 5개 구·군을 지방세청이 운영, 과세표 등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는 특별교부금 6억원 등의 인센티브 를 제공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도 다양한 차량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세워 차등적인 징수 행동을 펼친다.

우선 서구는 영의천 재민 마천을 위 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연 38회 지방세 체납액 일괄정산키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 는 7개 징수 특별대책을 구별 운영, △체납자의 부당선·지방 등 재산

이물리 증가는 △500만원 이상 고 액 체납세 징수 연달라 편성 및 운영 △세무과 인 차원 개편인 △과세관제 시행 △세무과인 개편인 및 과세관 부당선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정보 권안연계를 통한 재권양위 등을 통한 체납액 정리를 펼친다.

북구는 체납자의 금융재산 및 골프 회원권 등 무채자산, 급여, 보상금, 임대료조금, 특허, 저작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운영하는 한편 사망 채납자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조세부담 연 2회 배어 관대 상이여 있는 상속세 산에 대한 상속대납이 및 업무·관 제정확을 계획한다.

이밖에도 담사구는 지방세납부 A RS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상구 는 운영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정 리를 확대하는 등 과 과세제도 나인 재인 징수활동 및 행정구제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에서는 구·군간 지방세 체 납관리 및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 분 등을 통해 강력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지방정정영 도도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한기자 jmb@daegu.co.kr

〈대구시 차량체납 징수촉탁제 시행 징수총력〉

- 3) 변호관영치 방법 변화 ① 체납자료를 출력하여 변호관과 대조 → ② PDA(휴대용조회기)로 차량번호입력후 조회 → ③ 차량에 주행형 차량단속시스템을 부착하여 인식 → ④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 영치시스템 도입

민원증가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직원간 내부갈등은 인력보강 및 인센티브 제공, 상호소통을 통한 목표의식 공유로 극복

타구군의 체납자인 민원인과의 마찰, 구군 세무공무원의 업무 증가 가능성, 직원의 불만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변호판영치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여 변호판영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력을 채용하여 영치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해 시장 표창, 해외 연수 시 우선 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체납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조세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주춧돌이 된다는 자긍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게 되었다.

체납처분활동 강화에 따른 체납자 민원 발생은 사전 예고문 발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로 상생전략 추진

경제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및 변호판영치 예고문을 사전에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탈세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게 납부약속을 받고 분할납부 후 변호판을 반환하여 사후 관리하고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체납자와 과세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세무행정을 추진하였다.

주요성과

자동차세 체납 징수액 획기적 증대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변호판영치 대수가 전년보다 1천여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15억원 추가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대구시 자동차세 체납액 272억원 중 2013. 6월말 현재 82억원을 징수(징수율 30.1%)하여 전년 동기 327억원 중 67억원 징수(징수율 20.5%)에 대비해 15억원 추가징수하고 징수율은 9.6%p 상승하였다.

5

교육훈련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지방
행정연수원(완주),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세종)에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으로 교육기관간 소통과 협업 촉진.



사업의 필요성

지방이전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

2013년부터 교육훈련기관의 지방이전이 시작되었고 2016년까지 14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수 강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강사섭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직자들 역시 근무지와 교육훈련기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비용 및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따라서 원격지 간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교육훈련기관 간 소통과 협업

현재도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과정이나 콘텐츠 공유가 거의 없이 칸막이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교육훈련기관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교육운영 상 협업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이전으로 인한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관 간 합동교육이나 교육과정 공동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정부 내 최초의 원격강의시스템 도입

최근 들어 원격영상회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실시간 영상전송 기술을 교육에 접목, 실시간 원격강의를 도입한다면 우려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발상이 문제해결의 시작이었다.

추진과정

사례조사 및 구축 컨설팅(ISP) 단계

2012년 5월 원격강의 도입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한 후,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해 원격강의를 활용하는 다수의 대학과 교육기관을 방문 조사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원격강의시스템 구축단계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지방행정연수원(완주) 그리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에 양방향 원격강의실을 구축하고, 세종청사 공용영상회의실과는 기존 업무망을 활용하여 연계하였다. 각 강의실에는 Full-HD 카메라와 LED모니터, 무선 추적마이크와 고성능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될 영상과 음성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중앙공무원교육원 내에는 원격강의시스템 컨트롤타워가 될 통합운영센터를 마련했다.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스튜디오〉



〈완주 지방행정연수원 원격강의실〉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원격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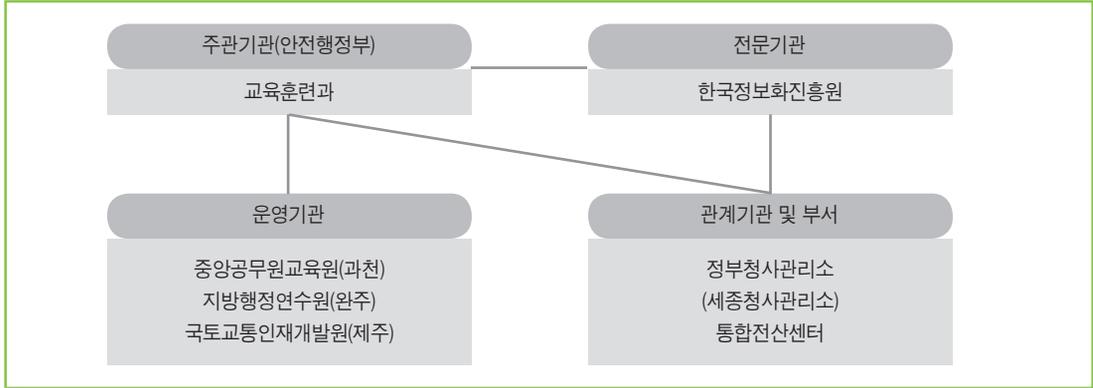


〈세종청사 공용영상회의실〉

원격강의협의체 구성 및 운영 단계

원격강의는 2원이나 3원 혹은 그 이상의 동시 방송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2013년 7월에 구축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담당자들과 관련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원격강의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를 통해 구축과정을 공동 관리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청사관리소에서는 시설 공동활용 및 연계를 협조해주었고, 통합전산센터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향후 원격강의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단계에서도 협의체 구성원들이 합동강의 개발, 교육일정 조정, 강사풀 발굴 및 공유 등 기관 내 활용과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원격강의협의체 구성도〉

시범강의 실시 및 의견수렴 단계

원격강의 장비 구축은 2013년 9월에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시스템적으로는 네트워크 연결이나 작동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원격강의시스템을 활용하는 강사나 교육생들이 이에 적응하고 강의에 몰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했다.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중 일부 강의를 원격으로 실시해보기로 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 이상 시범강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생 설문결과 시스템 작동상태에 대해서는 평균 90%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세종청사 재직자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종→제주 간 시범 원격강의 화면〉

원격강의시스템 개통 및 공무원원격교육센터 개소

2013년 12월 16일에 드디어 원격강의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중앙공무원 스튜디오 및 통합운영센터는 ‘공무원 원격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각 구축기관장들과 제1차관님이 원격으로 환담을 나누었고, 김현욱 아나운서가 ‘효과적인 소통기술’이라는 주제로 완주, 제주, 세종에 있는 교육생들에게 동시에 원격으로 강의를 하였다. 과천에 있는 강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타 지역 교육생들의 반응도 살펴보기도 하였다.



〈과천 공무원 원격교육센터〉

기대되는 효과

이동비용과 시간의 절감

원격강의를 통해 교육을 받는다면 강사나 교육생의 이동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간 교육시간의 10%만 원격강의로 운영해도 교육훈련기관 당 0.5~0.8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동시간의 가치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강화

원격강의시설은 교육뿐 아니라 면대면 회의와 같은 소통창구로도 이용가능하다. 교육훈련기관 간의 주기적 회의는 물론이고, 공동특강 실시 및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협업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지만 교육훈련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과제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및 연계 확대

교육훈련기관의 지방이전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이전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나주), 중앙공무원교육원(진천) 등에 원격강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종청사에 추가적으로 구축될 3개 공용영상회의실과도 단계별로 연계할 예정이다.

원격강의 운영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지속적인 시범강의와 개선 및 보완 노력으로 안정적 원격강의환경이 형성되었다. 이제 원격강의 운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강의일정 및 강의실 예약, 강의설문 및 실적통계 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강의 VOD를 포털에 오픈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의 목표이다.

6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영상회의 활성화

31개 시·군이 남북으로 분산된 경기도는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회의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추진배경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31개 시·군이 남북으로 분산되어 있어 집합회의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많이 발생되어, 경기도청 영상회의시스템은 영상회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소통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내부 행정 업무를 줄여 현장을 더 찾고 도민과 더 자주 소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 추진 되었으며, 첨단 IT 기반 영상회의 활용으로 영상회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최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경기도는 1997년에 다자간 영상회의시스템이 보편화 되지 않은 시기에 영상전화를 이용한 영상회의시스템을 자체 설계하여 북부청사 및 31개 시·군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영상회의시스템은 2007년도에 일대일 HD 코덱 방식으로 구축하여 각종 콘텐츠의 화면공유, 회의영상녹화, 고화질화면 및 음성지원 기능으로 대면 회의와 같은 쾌적하고 현장감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영상회의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사례

도↔시·군간 영상회의

철도파업, 조류독감 등 중앙에서 주재하는 긴급 현안사항 시달 시·도 영상회의 내용을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시달하는 회의 내용을 동시에 전파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을 영상회의용과 재난상황용으로 물리적 이중화 구성하여 영상회의를 동시에 사용 가능토록 구축하여 업무 협조 및 현안사항 시달을 위한 영상회의와 재난상황 발생시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 재난상황실 영상회의로 재난현장 시청과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청↔북부청사 확대간부 영상회의

경기도는 본청과 북부청사로 나누어져 있어 실국 및 실과 협조에 거리적 제한으로 업무 공유에 제한이 있다. 본청과 북부청사간 업무 공유를 위하여 본청-북부청사는 매주 도지사가 주관하는 실국장, 과장,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 하고 있으며, 실국장 자리 이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본청과 북부청사간 영상회의시스템을 2중화 구성하여 영상화면과 회의자료 화면을 동시에 쌍방향 전송하여 대면회의와 같은 환경으로 영상회의를 지원하고 있다.



외청·사업소 영상중계

경기도는 북부청사, 건설본부 등 40여개 외청·사업소가 31개 시군에 분산되어 있어 외청·사업소 직원이 본청 및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참석이 제한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무인원이 많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15개 외청·사업소에 영상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청, 북부청사, 경기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월례초회, 경기포럼, 도의회 상임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을 영상으로 중계하여 외청·사업소 대강당 및 청내 유선방송으로 시청 가능하여 많은 인원 이동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업무 공백을 방지한다.

기대되는 효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집합회의를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차량 운행에 따른 Co2 배출을 억제, 녹색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린IT 환경 제공과 2013년도 집합회의를 영상회의(212건)로 대체하여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2,957백만원 절감하였다. 지속적인 홍보 및 회의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 회의문화 정착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영상회의에 따른 예산절감액 산출 ◆

- 영상회의 예산절감 내역 : 31,461명 × 94,000원 = 2,957,334천원
 - 확대 간부회의 : 25회 × 50명 = 1,250명
 - 시군 영상회의 : 41회 × 96명 = 3,936명
 - 중앙 영상회의 : 15회 × 5명 = 75명
 - 북부청사, 외청·사업소 영상중계 : 131회 × 200명 = 26,200명

◆ 영상회의에 따른 인건비 산출 ◆

- 집합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내역(1인당) : 94,000원
 - ▶ 집합회의 왕복 이동시간(평균 3시간) 인건비 + 출장 경비
 - 인건비 : 22,485원 × 3시간 = 67,000원
 - 출장비 : 27,000원
 - (지방사무관 20호봉 1시간 인건비 : 봉급3,597,700원 ÷ 20일 ÷ 8시간 = 22,485원)

• 영상회의 운영실적

구 분	계	영상회의			영상중계	비고
		간부회의	중앙	시군		
합 계	399	47	24	91	237	
2013년	212	25	15	41	131	
2012년	187	22	9	50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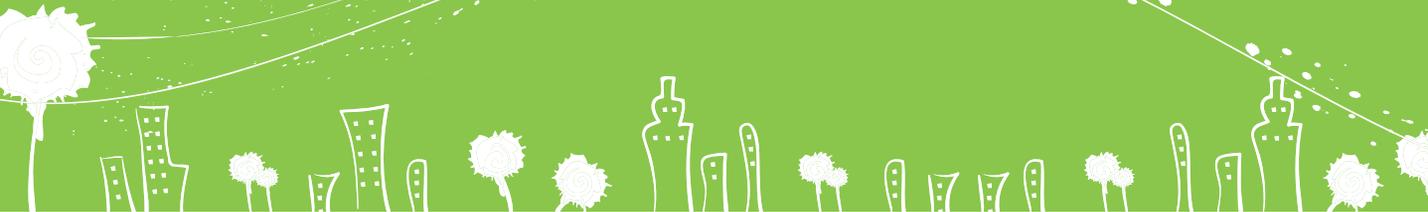
앞으로의 과제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행정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최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지 간 회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며 쾌적한 영상회의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환경 마련과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한 유지보수 운영 체계의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로 여행자출입국 관리 칸막이 제거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편해지는 공항 출입국

관세청,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질병관리본부 등 내외국인의 공항 출입국을 관리하는 정부기관(CIQ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여행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여행지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필요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6백여 편 가량의 항공기가 세계 각국으로 오르내리며,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출입국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허브공항이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국 하기 위해서는 CIQ라는 약자로 불리우는 기관(Customs : 관세청, Immigration : 법무부, Quarantine :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절차(휴대품 통관, 출입국 심사, 검역)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CIQ 기관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여행자정보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해지는 출입국 업무에 비해 CIQ 기관끼리의 정보공유는 전무하여 이로 인해 야기되는 CIQ 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는 출입국 시간 지연,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 증가 등의 폐해로 이어져 곧바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 CIQ기관의 출입국 업무 ◆



〈휴대품 통관〉
【관세청】
(세관)



〈출입국 심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
【질병관리본부】
(동·식물 검역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CIQ기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와 저가항공사로부터 각각 업무에 필요한 여행자 정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입수에 수반되는 비용은 정부예산을 통해 지급되는데 3개 기관에서 연간 11억원에 달한다.

항공사에서 CIQ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항공 승객정보, 항공 예약정보 등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보를 CIQ 기관별로 각각 전송료를 지불하고 입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화 된 정보입수 창구를 마련하여 통합된 정보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2011년 2월 공항상주 CIQ 기관인 관세청, 법무부, 질병관리본부는 여행자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정보공유의 범위와 제공방법, 그리고 주관기관 선정을 두고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고자 수차례의 논의를 거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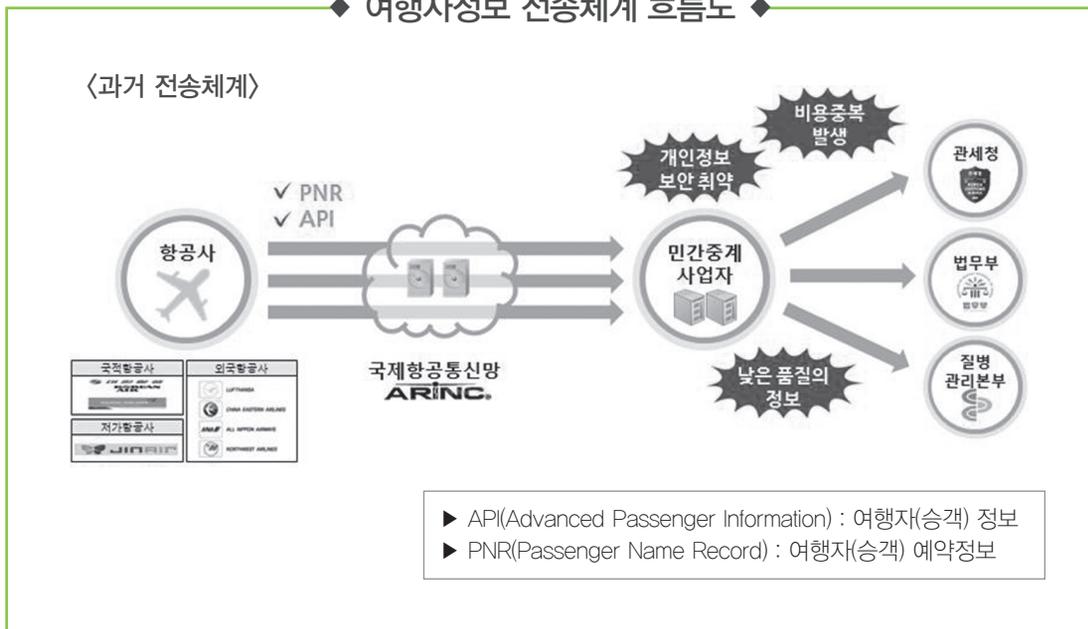
2011년 10월 CIQ기관들은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관세청을 주관기관으로 CIQ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2년 12월까지 <여행자정보>의 제공환경을 구축하는 1차 사업과 <여행자 예약정보>의 제공환경을 구축하는 2차 사업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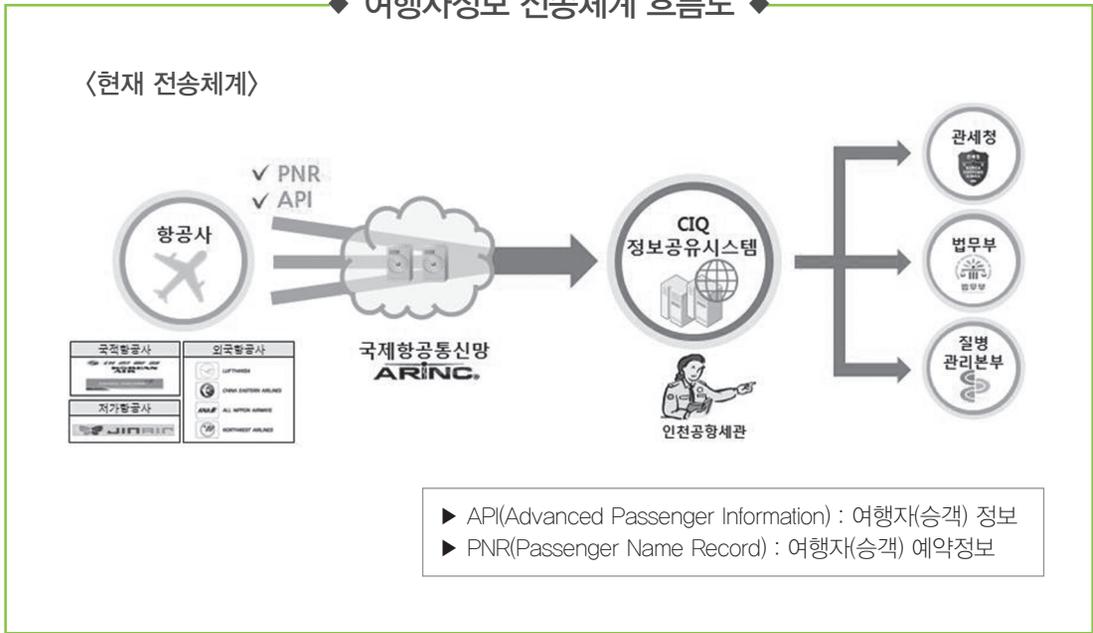
2013년 1월부터 새로 구축된 CIQ정보공유시스템의 여행자정보 전송서비스를 통해 관세청부터 시작하여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차례로 여행자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여행자 정보전송 경로를 보다 더 단순화하여 정보전송의 효율성 및 늘어나는 정보제공 수요에 대비하고자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도 정보 공동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기술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 여행자정보 전송체계 흐름도 ◆



◆ 여행자정보 전송체계 흐름도 ◆



주요성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여행자 출입국관리

CIQ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여행자정보 활용으로 각 CIQ기관의 업무효율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관세청은 CIQ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2012년 우범여행자 등을 약 3만5천 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체 마약검거 실적 중 51%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CIQ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입수되는 정보를 약 6만4천 건의 출입국심사 실적자료로 활용했다. 질병관리본부도 감염병 추적조사 등에 CIQ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CIQ기관 전체적으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되어 마약, 감염병, 불량 먹을거리 등 국민생활 저해요소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CIQ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정보파악으로 우범성이 없는 여행자의 출입국 절차를 상대적으로 간소화하여 출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출입국 시간의 단축은 인천국제공항이 2013년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평가에서 8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보공동 활용 성과〉

관련기관	국경관리 주요 업무	CIQ정보공유시스템 활용
관세청	마약사범 등 국민경제 혼란 조성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등	'12년 우범여행자 등 적발 → 35,602건 전체 마약검거 실적 중 51% 차지
법무부	입국금지 · 시증규제 · 출입국우범자 등 사전 분석 및 출입국심사	'09 ~ '12 → 63,966건
질병관리 본부	감염병 의심환자 분류 및 역학 조사	감염병 추적조사 등 활용

예산절감 효과

항공사로부터 여행자정보 입수에는 전송료 등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간 CIQ기관들은 따로 따로 이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새로 구축된 CIQ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여행자정보를 제공받고 정보입수 비용을 단일화하여 지급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0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각 CIQ 기관에서 필요정보 입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각각 20억원이 소요되는 별도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미래비전

CIQ기관의 정보공유는 비로서 첫 삽을 뜬 것이다. 정보공유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여행자가 좀 더 편리하게 공항 출입국을 하고 국민 생활 저해요소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될 수 있기까지는 넘어야 할 도전이 아직도 많다.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여행자출입국 관리 권역이 체계

뿌리 깊은 부처간 이기주의와 소통부재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CIQ기관간 정보공유는 이러한 구태를 극복하고 오로지 국민의 좀 더 행복한 삶의 지원을 목적으로 내 것부터 먼저 열어주는 희생과 양보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앞으로도 여행자정보 공유의 정착을 위해서 24시간 헬프데스크 운영 등 민간수준 이상의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과 통신·장비 등 기간인프라 확충으로 365일 끊임없는 안정적 운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8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협업 시스템 정착

산림청은 「영상회의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영상회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디지털 협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필요성

소통 ·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3.0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가치가 행정 전반에 퍼져 나가면서 기관 내 · 외부 간 소통 및 협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소속기관과의 신속 · 원활한 협업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시 ·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영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다.

추진 과정

공감대 형성이 출발점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문화 개선, 영상회의 장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선결과제로 선정하여 '13년 8월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영상회의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였다.

「영상회의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캠페인을 전개하다

영상회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직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다.



〈영상회의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캠페인 포스터

대면회의의 관행 때문에 영상회의를 낯설어하고 사용을 기피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상회의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남자직원 1명과 여자직원 2명을 모델로 한 ‘영상회의의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1인 1회 이상 영상회의 참여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영상회의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상회의 가이드라인을 전 기관에 배포하고 시범테스트와 함께 전 직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상회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다.

영상회의실을 만들고 장비를 보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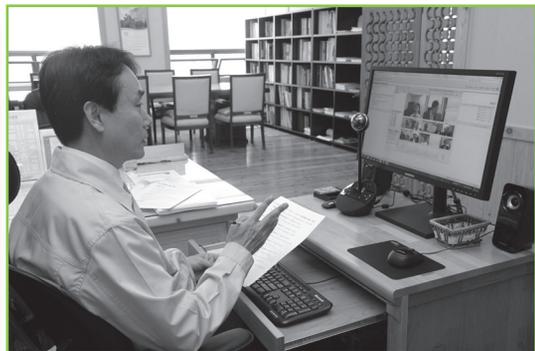
산림청 본청 상황실에 자체 영상회의 장비를 새로이 구비하고 직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영상회의 전용 회의실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2차 소속기관과의 회의가 빈번한 1차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도 영상회의실을 구축하였고, 개인 컴퓨터를 통해 상시 디지털협업이 가능하도록 PC용 헤드셋을 보급하였다.

모든 회의는 영상회의를 통하다

국정·협업과제 및 정부3.0 점검회의, 확대간부회의 등 주요회의를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갔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현안점검회의, 정부3.0 성과보고회 등이 모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고, 거리가 멀어 업무협약에 애로를 겪었던 제주도청과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책협약도 영상회의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졌다.



〈산림행정3.0 성과보고회(9.26, 청장주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회의(9.30, 차장주재)〉



〈힐링프로그램 참여 확산 회의(10.1)〉



〈국립산림과학원 주간 업무보고(11.4)〉

주요 성과

직원들의 공감이가 영상회의의 문화를 만든다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점차 확대되면서 '13. 8월에 고작 36회(212명 참석) 개최되었던 영상회의가 두 달 후인 10월에는 289회(996명 참석)나 개최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3년 한 해 동안 산림청 정원 1,747명을 10%가량 상회하는 연인원 1,898명이 영상회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요 지정회의 총 개최건수 대비 영상회의 건수가 안전행정부 권장기준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65%를 달성할 정도로 영상회의의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비용 절감은 기본, 시간 절약은 보너스

전국에 산재한 소속기관과의 빈번한 회의가 영상회의로 전환되면서 업무시간이 절약되고 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 실례로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영상회의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방청(원주)에서 6개 소속기관별로 2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1회 개최하는 데 636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41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부지방산림청 효과분석〉

▶ 2인 참석기준 1회 회의 개최 시 635,768원 절감

(단위: 원)

구분	유류비 및 통행료				여비	총계
	유류비	통행료	편도	왕복		
춘천국유림관리소	16,362	4,000	20,362	40,724	60,000	
홍천국유림관리소	11,004	3,000	14,004	28,008	60,000	
서울국유림관리소	21,300	5,200	26,500	53,000	60,000	
수원국유림관리소	21,548	71,000	28,648	57,296	60,000	
인제국유림관리소	20,061	3,000	23,061	46,122	60,000	
양구국유림관리소	21,309	4,000	25,309	50,618	60,000	
합계	111,584	26,300	137,884	275,768	360,000	635,768

▶ 2인 참석기준 1회 개최 시 41시간 절감

(단위: 분)

구분	소요시간	왕복	2인 기준
춘천국유림관리소	83	166	332
홍천국유림관리소	67	134	268
서울국유림관리소	107	214	428
수원국유림관리소	106	212	424
인제국유림관리소	127	254	508
양구국유림관리소	123	246	492
합계	613	1,226	2,452

성공 요인

'06년 영상회의 도입 초기에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높은 기술의 고화질 영상장비를 전 직원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던 점이 영상회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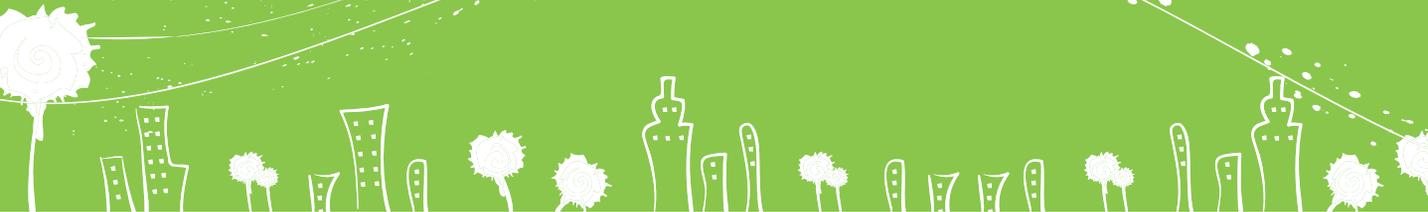
- **체험 전** : “그거 옛날에 다 해봤던 거야. 그거 설치해봤자 사용도 안 해 불편하고 중간에 끊어지고 화질도 안 좋아.”(산림청 본청 H 주무관)
- **체험 후** : “세상에 이렇게 화질이 좋아? 이거 뭐 사무실에 켜 놓으면 감시 카메라로 쓸 수도 있겠는데! 세상 좋아 졌다 좋아 졌어.”(산림청 본청 J 서기관)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영상회의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캠페인은 직원들의 영상회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켰고, 더불어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주요회의를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영상회의의 이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했던 것 등이 시너지를 일으켜 영상회의 문화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다.

9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공유로 방문민원 획기적 감축

해양경찰청, 수협, 지자체, 해양수산부는 선박 출입항 관련 정보의 상호공유를 통해 방문민원을 대폭감축하여 어업종사자의 불편을 크게 해소 하였다.



필요성

어선 등 출입항 신고 대상 선박은 면세유 수급, 수협 공제 보험 처리 등 수협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선박출입항 신고서', '어선 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해양경찰 발급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민원인은 해양경찰로부터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매번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 서류를 받고 재차 수협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불편한 진실

출근을 할 때 자동차와 배가 다른 이야기!

매일 아침 출근길! 자가용을 타고 집을 나설 때 아무도 뭐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려면 뭔가 할 일이 많다. 출입항 신고서, 보험증서, 선원승선원 명부 등 5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는 해양경찰의 파출소를 방문해서 출항신고를 하고 바다로 갈 수 있다.

매일 같이 배를 타고 생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로서는 여간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힘들게 조업을 하고 와서 다시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유를 할 때 자동차와 배가 다른 이야기!

자동차야 길에 널린 주유소에 가서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돈을 주면 친절함 주유원이 기름도 넣고 계산서까지 가져다준다. 배는 어떨까? 생업을 위해 지원하는 면세유라는 이유로 수협을 찾는다. 면세유는 배를 운항한 실적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은 면세유를 사기 위해 수협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양경찰의 파출소를 찾는다. 경찰관은 컴퓨터 전산망을 검색하여 서류 한 장을 건네준다. 어민은 그것을 들고 다시 수협으로 가서 서류를 보여주고서야 기름을 살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와 배가 다른 이야기!

자동차를 타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난다.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와 그 일을 대신해 준다. 배는 어떤가? 어민들에게 수협공제라는 보험은 자동차의 책임보험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또 다시 해양경찰의 파출소를 들려야 한다. 경찰관은 또 컴퓨터 전산망을 검색하여 서류 몇 장을 건네준다. 어민을 그것을 들고 또 다시 수협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와 배에 관한 불편한 진실〉

▶ 생업의 현장으로 나갈 때

자동차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음
배	생업을 위해 출항 할 때는 반드시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 최소 5가지 이상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함

▶ 주유를 할 때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면 편안하게 주유하고 친절함 서비스를 받음
배	면세유를 받기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에 들리 출입항신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재차 이것을 수협에 제출

▶ 사고가 났을 때 처리

자동차	보험회사 전화 한 통화면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와 문제 해결
배	보험공제를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 사고사실 확인서, 선원 승선원 명부 등 서류를 발급받고 재차 이것을 수협에 제출

주요내용

협업의 힘으로 불편한 진실을 해결! 해양경찰이 가진 데이터의 활용가치

사실 바다라는 공간 때문인지 해양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면면을 놓고 보면 우리 국민! 특히 정보 접근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들이다. 앞서 이야기 한 면세유와 보험신청 이외에도 어선 감척사업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사실 우리 어촌의 특성상 어업을 통한 소득의 정확한 측정은 곤란하다.

이때 조업을 위해 출입항을 했던 기록은 소득 산정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선원 중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이 되면 그 기간 중에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선원의 승선여부에 관한 정보는 오직 해양경찰만이 갖고 있다.

또 선원과 선주간의 임금체불에 관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선원의 승선 사실을 입증해 줄 유일한 자료는 해양경찰만이 갖고 있다.

이렇듯 해양경찰의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고령자이거나 또는 바다라는 공간적 환경 때문에 정보 획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정보 취약계층임이 특징이다.

〈해양경찰청 선박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민원서류와 용도〉

구분	수협	지자체	항만청	기타(노동부 등)
요청비율	65%	15%	12%	8%
서류용도	면세유 신청 보험공제 어선감척사업 위판실적 어가목돈지원 보험금 환급	어선감척 사업 어선장비지원 어업인 후계자 예비군·민방위 훈련 기초생활 수급자 파악 유류피해보상 학자금 보조	해기사 면허 갱신 해기사 면허시험 응시	임금체불소송 고용계약 영세업자 세금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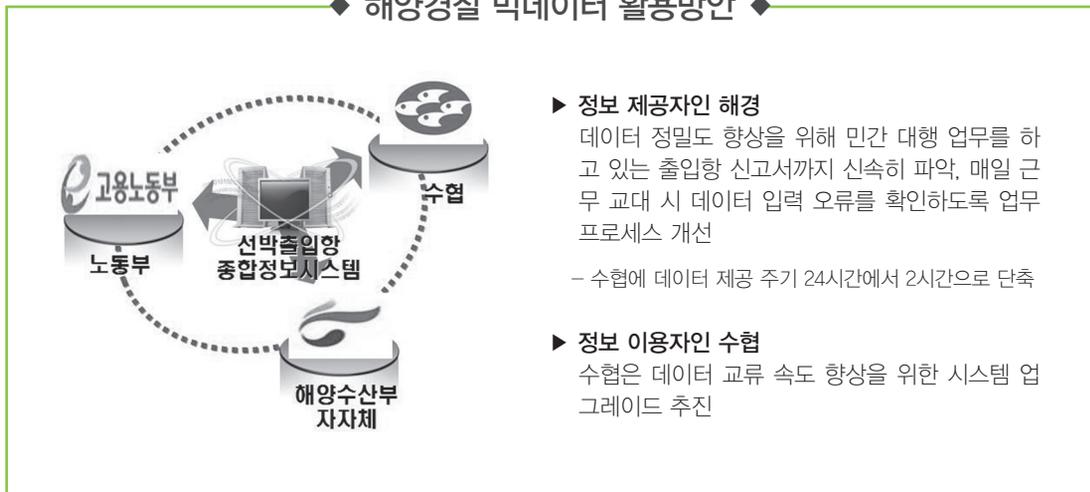
손톱 밑 가시를 빼는 노력!

그동안 수협, 자자체, 해수부는 해양종사자와 어민이 면세유를 신청하거나 보험공제, 해기사 면허 갱신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어민들은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수협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실정이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는 2011년에 처음 있었다. 해양경찰청이 갖고 있는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을 전 행정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 되었으나 지금과 같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와는 차원이 달랐다.¹⁾ 당시까지만 해도 협업보다는 소관 사무를 더 중요시 하는 패러다임이었으므로 원활한 이행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협업이 문제해결의 Key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기관끼리 할 수 있는 일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해양경찰은 민간에서 신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의 출입항 정보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일 근무 교대 시 데이터 입력 오류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 파출소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주기를 2시간 이내로 단축 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빅데이터의 정밀성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정보 이용자인 수협은 해양경찰청과 연계된 시스템의 데이터 교류 속도 향상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기로 했다.

◆ 해양경찰 빅데이터 활용방안 ◆



1) 당시 면세유를 구입하기 위한 출입항 사실 확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나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선원 개개인의 승선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양경찰이 갖고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으면 공제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음.

주요성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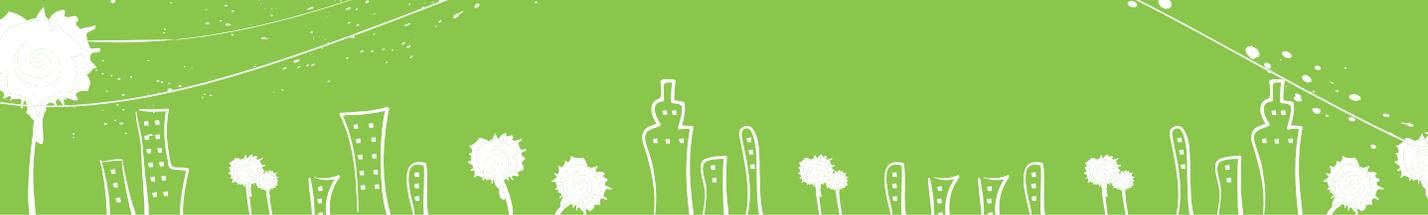
이러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해야 했던 방문민원은 92%가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전체 민원서류 발급 건수도 30%가량 줄어들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단순 수치의 감소 이외에도 생업 종사자의 시간 절약, 간접비용 절감 및 불편 발생 요인 제거 등의 효과²⁾ 등이 기대된다.

2) 안전행정부의 공유체계 구축사업 ROI 분석 결과 : 연간 2억 5천 1백만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안전행정부의 공유체계 구축사업 ROI 분석 결과) 53,787건(12년 민원서류 발급량)×4,637원(건당 절감비용) = 2억 5천 1백만원

10

영상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통계 행정의 효율화 도모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조사지침이나 기준의 정확한 전달이 중요한데 통계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이 가능해졌다.



필요성

통계작성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 영상회의

통계청은 전국을 아우르는 대규모 통계 조사를 위해 대전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에 54개 기관이 산재해있고, 전체 3,150여명의 80%인 2,500여명의 직원이 조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획한 조사의 기준이나 지침을 현장까지 충실히 전달하는게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대면회의나 집합교육을 통한 정보의 전달은 한정된 조사기간을 촉박하게 하는 등 각종 행정 비효율을 낳고 있었다. 전국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영상회의의 활용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기에 적합한 수단이었다.

추진 과정 및 주요내용

영상회의 활용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실시

안전행정부에서 부처간 협업을 위해 구축한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의 영상회의 기능은 마침 이러한 통계청의 필요에 딱 맞는 수단이었다. 일단 PC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협업시스템의 영상회의는 별도의 “예산확보⇒사업수행”의 과정을 생략, 저비용으로 당장 실행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업무 책상에서 즉각적으로 회의 개최·참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통계조사에 요구되는 “현장과 관리부서간 신속한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통계청에 안성맞춤이었다.

다만, 전국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였다. 국정원은 민감한 업무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할 경우, 업무용PC와 인터넷 접속용PC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관의 보안성이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 이처럼 업무용PC가 별도로 분리되어있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첫째, 별도의 구분 공간을 마련하고, 둘째,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영상회의 전용PC”를 구비하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통계청은 발 빠르게 영상회의용 장비(헤드셋, PC카메라)를 구비하고 각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 전용PC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영상회의의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통계청 영상회의 좌석구축 현황〉

구분	전용 좌석	비고
총계	169	
본청	31	10층 영상교육실(27) / 12층 스마트오피스(4)
지방청	138	지방청 66 / 사무소 72
경인청	17	지방청 5 / 사무소 12
동북청	35	지방청 23 / 사무소 12
호남청	44	지방청 20 / 사무소 24
동남청	28	지방청 12 / 사무소 16
충청청	14	지방청 6 / 사무소 8

◆ 통계청 본청 영상회의 환경 구축 ◆



〈통계청 영상교육실(10층) : 27석〉



〈통계청 스마트오피스(12층) : 4석〉

영상회의 활용 실적

통계청은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 본부-지방청-사무소간 소통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 적극 활용의지를 보도자료('13.5월)를 통해 표명하였다. 곧이어 국과장 이상 간부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영상회의 활용법을 교육받기 시작하였으며, 7월 중에는 전 사무소 소장은 물론 담당직원들 까지 영상회의 활용법 교육을 완료하였다.

PC기반 영상회의를 통하여 선도적으로 전 소속기관 영상회의망을 구축한 통계청은 2013년 총 545회 영상회의 실시하였고, 누적 이용자수 1,815명, 주요 3종의 회의에 대하여는 총11회(100%)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따른 여비 등 예산절감, 직원 이동시간 단축 등 업무효율화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업행정 우수사례집

통계청의 발빠른 영상회의 활용으로 2013년 6월 안행부주관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공유 워크숍」에서 영상회의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5차 정부 3.0 추진성과 점검회의」에서 영상회의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사례를 발표하는 등 쏠부처 영상회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12월에는 영상회의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실시 1년차 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영상회의 활성화에 성공하였다.

◆ 통계청 영상회의의 활용 ◆



〈통계청장 주재 지방청장 회의〉



〈통계사무소장 영상회의〉

성공요인과 남은 과제

이러한 활성화 성공은 그동안 통계청이 업무 특성상 끊임없는 조사관리-조사현장간 의사소통이 필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연락, 의견수렴, 상황전파 등이 영상회의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영상회의 시스템의 동시접속(현재 100명) 한도 확대, 보안성 강화를 통한 모든 업무용 PC 활용 가능화 등이 숙제로 남았으며, 특히 보안 문제의 해결로 지자체 등에서 동 영상회의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통계청에서 지자체와 공조하는 통계(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작성시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통한 협업은 각종 행정낭비를 줄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생산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건강과 환경,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구축

충남, 교육청, 각급학교 협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 생산자 소득 증대 도모.



추진배경

충청남도 :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 시스템을 통한 민관 협업체계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재료 생산지에서 소비지(학교)까지의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단계를 개선하여 지역내 생산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로컬푸드의 공동생산·보관·유통지원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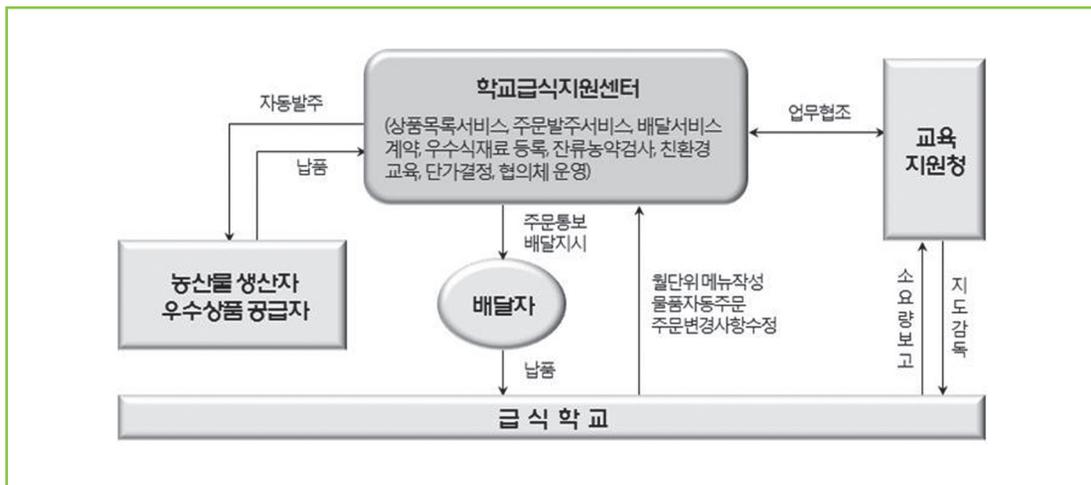
주요 추진내용

개요

2013년에 2개 지역(당진/아산)에 시범구축후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웹 기반 서비스로 구축하고, 이를 각 시·군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향후 교육부 나이스(NEIS)/에듀파인(EDUFINE)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발주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행정업무시간 단축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식재료 이력 추적관리로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존 수기 수발주 업무의 시스템화를 통한 급식센터 업무혁신과 처리시간 단축 및 인력절감으로 급식센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공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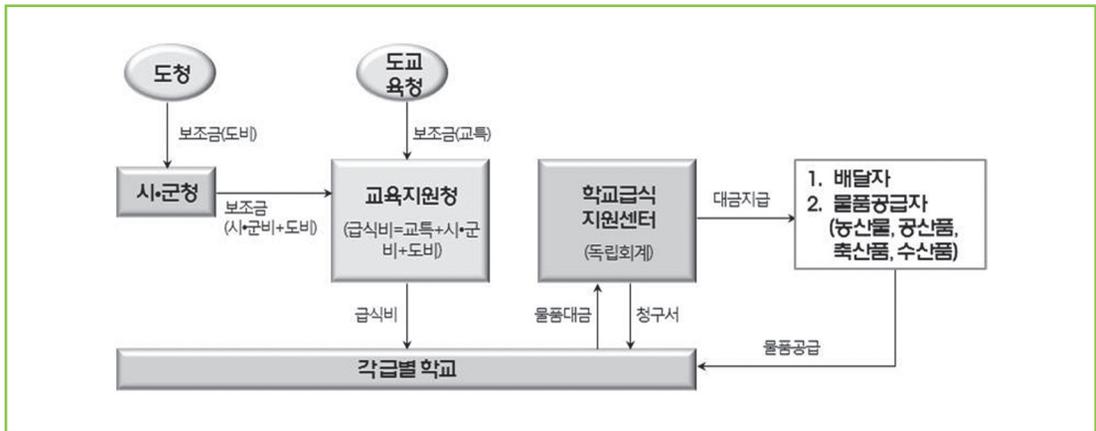
학교급식의 모든 것(식재료 선정기준, 상품별 구매액, 학교별 소비량 등)을 상시 공개하여 학교급식에 대해 영양교사, 행정실,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공급현황을 참고하여 학교급식정책 및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학교급식운영 표준 시스템의 운영 모델〉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통한 협업체계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은 도 및 시군, 교육청, 학교, 급식지원센터 등이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공동 관리하고 공개·공유함으로써 관련 조직 간의 연결고리(소통) 역할을 하고 '식재료의 공급'이라는 일상 업무 외에도 학생들의 생산현장 방문, 식생활교육, 전통식품 견학 및 실습, 도시·농촌의 소통에도 기여 하였다.



〈학교급식 협업 : 회계흐름 기준〉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통한 민관 협조체계

구분	구성	주요협업
학교급식운영 시스템 심의위원회	충청남도, 교육청, 농산물생산자,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 검토·조정 • 시스템 구축 정책방향 협의 및 의견제시 • 향후 시스템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자문 • 학교급식 관련 시스템 연계 업무지원 • 상품목록에 등록 • 상품의 가격 결정
협조기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구축 정책방향 협의 및 의견제시 • 향후 시스템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 등
연계기관	교육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관련 시스템 연계 업무지원

추진성과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통한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활성화 제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충남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였고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증진 통한 로컬푸드 유통환경을 개선하였고 또한 지역 농민 / 가공업자의 안정적 소비 유통체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 생산, 가공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달성에 기여 하였다. 충남도 내 생산자와 소비자(학교, 학생, 학부모)와의 연대의식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먹거리를 통한 충남지역 사회적 신뢰자본의 구축에 기여하였다.

업무량은 줄이고, 변화는 최소로, 효과는 최대(11단계 → 6단계 축소)

현 학교급식 입찰 체계	로컬푸드 학교급식운영 시스템	비고
1. 영양교사 식단 작성	1. 영양교사가 식단 작성	
2. 식재료 소요량 산출	2. 식재료 소요량을 산출	
3. 품목군별로 분류		센터의 전품목 취급으로 분류 필요 없음
4. 행정실 업무처리	4. 상품목록에서 단가 확인하여 주문서 확정 및 예산 확정	'입찰관행'의 5-7을 대체.
5. 입찰 공고		
6. 낙찰자를 결정		
7. 월간 급식비 예산 확정		
8. 매주 차주 식재료를 낙찰자에게 주문	5. 주문서 작성과 동시에 급식센터로 자동 주문처리.	'입찰관행'의 8-9번 대체
9. 낙찰자는 중간납품업자에게 발주		상품공급자/배달자로 연결업무는 시스템 수행
현 학교급식 입찰 체계	로컬푸드 학교급식운영 시스템	비고
10. 중간납품업자는 낙찰자 창고에 급식일 전일 혹은 당일 새벽에 상품 배송	6. 식재료 수급 및 센터 저장창고재고 파악 후 QR코드 부착	
11. 학교별로 분류하여 학교에 배달	7. 학교별로 지정 배송차량 배송(위치추적)	연접학교 차량 배정